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353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김명숙
대구 동구
피고, 피항소인 합천군
대표자 군수 하창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임영수, 이정한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소
83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73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나. 2011. 6. 11.부터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770-1 전 969㎡ 중 별지 지적현황측

량성과도 표시 ㄴ, ㄷ 부분 375㎡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14,370원

을 지급하며,

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770-1 전 96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

ㄷ 부분 375㎡를 항소심 중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정지목에 따라 원상복구

하고 이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제1의 다.항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¹⁾.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770-1 전 969㎡ 중 771/969 지분에 관하여 2007. 2. 20.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7. 2. 26. 접수 제37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의 지분 중 63/969 지분에 관하여 차기섭이 2008. 2. 26.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8. 2. 26. 접수

1) 원고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제2항의 나.항의 14,730원은 이 판결서 청구취지 제1의 나.항과 같은 14,3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3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장리 770-1 전 96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ㄴ부분 232㎡는 구 거로, 같은 ㄴ부분 143㎡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이하 위 ㄴ,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피고는 2009.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준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07. 2. 20.부터 2011. 6. 10.까지의 미불용지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 735,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 2011. 6. 11.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14,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상회복으로서 항소심 종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정지목인 전(田)으로 원상복구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506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등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8. 2. 26.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08/969 지분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3. 26. 아스콘 포장공사를 준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그 이전부터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길용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구거, 도로일 경우 2009. 3. 26.부터 2011. 6. 10.까지의 임료는 별지 기재 표와 같이 162,504원이고, 2011. 6. 11.부터의 임료는 매월 6,1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2009. 3. 26.부터 원고가 부당이득의 기준일로 삼은 2011. 6. 10.까지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118,733원(= 162,504원×708/96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²⁾인 2011.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1. 6. 1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2)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산일은 해당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상당 부담이득액 매월 4,471원(=6,120원 × 708/969,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소유자가 위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사실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피고가 점유하기 이전부터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사실상 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전사용자인 차청길, 차상인이나, 현 공유자 차기섭 및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위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토지가 도로나 구거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접토지들의 효용가치가 확보, 증대되는 이익을 누렸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및 공유자가 위 토지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또한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9. 3.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아 그 점유 기간이 20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 644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점유개시 당시 그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청구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그 형상과 용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도로와 구거인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를 개시하여 아스콘으로 포장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전(田)인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13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아스콘 포장공사 이전의 상태로 복구 및 인도될 경우 위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 집중 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시 구거와 도로의 역할을 할 토지가 없어 주변 농지 등이 침수될 위험이 매우 커지는 점, 이 사건 도로의 포장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사실상 도로 등으로 일반 주민들에 의하여 계속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로 원고에게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토지의 포장철거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상회복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훈

신 동 훈



판사

이진영

이 진 영



판사

강성진

강 성 진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토지 소재	함천군 덕곡면 장리 770-1번지 외 3 필		측 적	1 1200
측 량 자	2011 년 4 월 29일	측량성과도	2011 년 4 월 29일	
	지적산업기사 강원규 (인)	작 성 자	지적기사 박창대 (인)	

현 황 표 시

범 례	명 칭
□	측사 로 사용중
□	구거 로 사용중
□	도로 로 사용중
□	아래빈칸

면 적 표 시

지번 번호	면적(㎡)
770-1 가	42
770-1 나	232
770-1 다	143
770-1 라	552
770-1	969
	아래빈칸

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1 년 4 월 29일

대한지적공사 울산.경남본부 함천군지사 (인)

비 고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으며, 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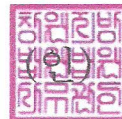
임료산정기간	기간 중 임료(원)	비고(원 미만 버림)
2009. 03. 26.~2009. 12. 31.	56,584	73,500원×281/365일
2010. 01. 01.~2010. 12. 31.	73,500	
2011. 01. 01.~2011. 06. 10.	32,420	
합계	162,504	

정본입니다.

2013. 8. 23.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전태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